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 III.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과제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끌려 다니는 과거의 원칙 없는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도 개혁·개방도 유도하지 못하며, 북핵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기본입장 아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실용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지난 10년에 걸친 햇볕정책의 '단맛'에 길들여진 북한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남북 관계는 자연히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남북관계를 일거에 단절과 대결의 초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심각한 체제위기를 맞은 북한은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 세습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러한 3대 세습을 용인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더욱 긴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처럼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가 맞물리면서 전례 없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펴온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II.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 1. 대북 실용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과거 10년에 걸쳐 펴던 대북 포용정책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호주의를 강화한 대북 실용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첫째, 과거 정부는 경제적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를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시했다. 둘째, 과거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 아래 핵문제의 와중에서도 경제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경연계 정책에 입각해 경제적 수단을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개방 유도에 활용하고자 했다. 셋째, 과거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이념과 선형적 정책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실용주의에 기초해 남북경협의 4원칙(비핵화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을 제시했다.

넷째, 과거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비동시적이고, 불균등하며, 비대칭적인 '느슨한 상호주의(diffuse reciprocity)'를 적용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동시적이고, 균등하며, 대칭적인 '엄격한 상호주의(specific reciprocity)'에 입각했다. 다섯째, 과거 정부는 보편적 원칙보다 민족문제의 특수성에 비중을 두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 예외주의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의 준수에 역점을 두었다.<sup>1)</sup>

1) 박종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와 도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2008. 10. 24).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비핵·개방·3000' 구상<sup>2)</sup>은 기술원조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물질 원조와 경험에 치중한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대북 실용정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3년 반이 넘도록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각종 위협 및 도발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돼온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 2 비핵화 원칙과 포괄적 대북지원 이니셔티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북핵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핵포기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남북관계를 별개로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북정책의 면모는 이 대통령이 2009년 8.15 경축사를 통해 비핵화 원칙과 포괄적 대북 인센티브 등을 강조한 '한반도의 신평화구상'에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한반도 신평화 구상은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등 상황 변화를 감안한 2009년판 '비핵·개방·3000' 이행 구상과 재래식 무기군축을 위한 남북간 대화로 정리될 수 있다. 비핵화에 따른 대북 인센티브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재래식 무기 감축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이 이 구상의 특징이다.

이 구상의 이행시기도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줄 때'로 설정되었다. '완전한 핵폐기' 이전이라도 '비핵·개방·3000'을 추진하되 그 시기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때'로 설정한 것이다. 군축을 위한 남북간 대화를 제의한 것도 북한 비핵화

2)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나선다면 10년 안에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괄적 대북지원 패키지인 '비핵·개방·3000'의 5대중점 프로젝트는 ① 경제: 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② 교육: 30만 산업인력 양성, ③ 재정: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④ 인프라: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⑤ 복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이다.

트랙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요소인 남북간 재래식 무기 군축협상 트랙을 함께 들림으로써 북한 핵폐기에 동기를 부여하고, 남북관계도 경제협력 수준을 넘어 정치·군사 등 이른바 '근본문제'까지 논의하는 단계로 직행하자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2009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북핵해법으로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즉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그랜드바겐' 제안과 관련, 북한 핵문제는 "남북 당사자 문제"라고 강조, 남북 대화시 핵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sup>3)</sup> 요컨대,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천명해온 '비핵·개방·3000',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그랜드바겐' 등의 여러 정책을 포괄하는 셈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 원칙과 포괄적 대북지원을 패키지화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남북대화에 올려 주도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해 온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하겠다.

### 3. 한반도 평화구조 모색과 통일 비전 제시

대북 포용정책을 폈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가 선순환할 것으로 보아 병행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노골화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체제에다 비핵화 원칙이 하나로 묶인 '한반도 평화구조'<sup>4)</sup>의 창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

3) 연합뉴스, 2009년 9월 21일자.

4)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과거 정부 시절의 표현 외에도 '한반도 평화구조'란 표현을 새롭게 쓰고 있다. '평화체제'란 용어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보편적

도 평화체제가 불가능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다. 즉, 이는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 후에야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한편 극심한 경제난과 3대 세습 등으로 북한의 체제 위기가 한층 가시화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3대 공동체 통일 구상'을 밝히면서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론화에 불을 지피면서 대북정책 차원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가섰다.<sup>5)</sup>

이 대통령이 밝힌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 구상은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sup>6)</sup>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위한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통일구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선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점이다. 즉, 현 상황에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인 경제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그랜드바겐'과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히 평화 및 경제 공동체는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단계'를, 민족공동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를 각각 상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모색하면서 통일 비전을 제시한 것은 확고한 비핵화 원칙 아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불

규범과 규칙으로서의 레짐(regime)이라는 뉘앙스가 묻어난다고 한다면, '평화구조'는 엄밀한 학술적 정의는 아니지만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과 그 틀(frame)에 역점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5)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당면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과정으로서의 통일' 정책은 대북정책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6) 당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1단계), '남북연합'(2단계), '통일국가'(3단계,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등 3단계 통일과정과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원칙으로 제시했다.

시에 닥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과제

#### 1. 남북대화 단절과 주변 열강의 개입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실용정책에 반발해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단절시키더니, 2008년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마저 겹치면서 남북관계는 크게 경색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차단, 개성관광 중단, 문산~개성공단 간 남북 정기열차 중단 등 일련의 대남 강경조치를 쏟아냈다.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금강산의 남측 소유 부동산을 동결·몰수하더니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에 어뢰공격을 가해 침몰시켰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 2010년 7월 한·미 해상 합동 군사훈련 계획이 확정되자, 중국은 서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데에 크게 반발함으로써 이제 한반도 문제가 얼마든지 주변 강국의 게임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남북문제가겠지만, 미·중간에는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 소재로 된 측면이 있다.

천안함 폭침 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중단 조치와 미국의 추가 제재로 경제난이 악화되고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한때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는 외면하고 대북 지원과 경협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호응을 얻지 못했다. 급기야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은 연평도의 민가까지 무차별 포격하는 6·25 이후 최대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그 후폭풍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어 놓았다.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도발로 촉발됐지만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는 다자이슈로 변모하였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촉매역할을 했고, 그 결과 북·중 동맹과 중·러 협력이 되살아나면서 그 파장은 동북아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시한폭탄'과 같은 북한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게 남북관계의 현실인 만큼, 정부는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시 남북대화의 창구를 열어 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북한의 과도기적 위기에 대한 관리

오늘날 북한은 과도기적 체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인 북한으로서는 그 절대권력자의 건강 이상으로 후계체제를 비상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야 하는 형편인 점을 우선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북한은 2010년에 전례 없이 한해에 두 차례나 최고인민회의를 연데 이어 9월에는 44년 만에 당대표자회를 개최, 3대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후계세습을 둘러싼 체제의 동요를 차단하려고 하였다.

둘째,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도 북한 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같으면 북한의 체제 특성상 민심은 변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후계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심을 다독일 '당근'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에서, 북한은 심화된 경제난 등으로 이 '당근' 확보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작년 연초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른바 '이밥에 고깃국'이 아직도 달성치 못한 유훈임을 자인한 것도 이를 입증하는 셈이다.

셋째, 북한 정권이 내부 정세를 추스르기 위해 강압통치를 더욱 강화

하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는 점이다.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워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하는 등 공포정치의 만연은 북한체제의 결속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밖에 시장을 통한 빠른 정보 유통, 정치적 무관심과 물질추구 등 지배적 사회가치의 변화,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의 혼재 등은 북한의 통치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북한 체제를 과도기적 위기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이러한 심상치 않은 내부 정세의 외부적 투영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북한은 내부 정세의 불안과 갈수록 차오르는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내부적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를 후계세습의 정당성으로 연 결시키기 위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문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고 있는 북한에게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 지도부가 '약속의 해'가 다가오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더 큰 일'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북한체제의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엄중한 과제가 우리의 대북정책에 주어진 셈이다.

### 3.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 심화

2000년대 들어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북한은 경제적 생존의 상당부분을 한국과 중국의 대북 경협·지원에 의존해 왔지만, 어느 한쪽에 경도되기 보다는 양국 사이에서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고 2009년부터는 중국의 대북 경제적 관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

7) 진행남, "북한의 내부 정세 변화와 과도기적 위기관리", JPI PeaceNet 2010-20(제주 평화연구원, 2010).



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

이는 2010년 남북경협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무역액 60.9억 달러 가운데 중국이 57%, 한국이 31%를 차지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즉, 2007년~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42.7%에서 57%로 커진 반면, 한국의 비중은 38.9%에서 31%로 감소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을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2011년 1년 사이에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러한 '북중 경제밀착'을 함축한다.

북중 경협 확대와 남북 경협 위축은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현안 해결에서 한국의 대북 영향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대북 경제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발언권이 커짐에 따라 한국 주도의 통일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 주도-미중 보증'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권익이 커질수록 보다 큰 발언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중교역은 북한의 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북중교역이 확대될수록 북한의 시장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남북경협은 북한 정부기관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확실하다. 중국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본격적인 대북경협을 연계시키고 있어 북중교역에선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대북관계를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중경협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북중경협을 견제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남북경협을 북중경협 견제용으로 바라보게 되면 남북경협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대중 '시계추 외교'에 휘말릴 공산이 농후해질 수 있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북

한에 대한 최소한의 '지렛대' 확보와 남북 경색국면 타개 차원에서 그 재개를 위한 주도면밀하고 전향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4. 통일 대비 북한 주민의 민심 얻기

우리의 대북정책도 이제는 보다 복합적인 인식의 틀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즉, 거시적으로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평화구조 구축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미시적으로는 북한의 정권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을 변화의 주체로 보는 발상 전환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하여선이 “햇볕정책은 제한적 교류협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핵선군정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면서 “단순히 외투를 벗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DNA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sup>9)</sup>한 것은 적절 하다.

최근 남한의 '한류' 드라마와 음악, 영화 등이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북한 체제의 DNA 변화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면서 사회문화적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TV나 DVD, 비디오 등을 통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들 가운데는, 이를테면 몸에 붙는 바지, 가슴이 파인 옷, 머리핀, 말투, 헤어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모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국경을 넘어 외부세계와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 등은 사적 영역에서 주로 거래되는 문화상품이자, 북한 주민과 외부 세계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셈이다.<sup>10)</sup>

8) 임수호, “북경경협 현황과 전망”, JPI 정책포럼 2011-16 (제주평화연구원, 2011).

9) 하여선, “연평도 위기 극복의 대북 복합 전략”, EAI 논평 제15호 (동아시아연구원, 2010. 12. 20).

10)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봄플러스, 2011).

북한 사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진전된 시장화는 이제 북한 당국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북한의 주민들도 이러한 시장을 통해 재빨리 유통되는 외부세계의 정보를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국경이 이처럼 다공화되고 있는(porous) 것 또한 도도한 시대적·역사적 흐름이라 하겠다. 더욱이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권에 대한 원망과 함께 변화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욕구를,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확산일로에 있는 '한류'가 대리만족시켜 주는 셈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의 민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는 일은 중대한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 IV. 맺는 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간접적 배경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대담성 증가론을 드는 견해가 시사하는 바도 여기에 있다. 선군정치 자체가 과잉 안보론에 의거해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체제 유지의 대내외 자원을 획득하려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남북 당국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조기에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건인해 내는 일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남북대화의 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닫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경직된 정권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위에서 좀더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는 '햇볕정책'으로 단순히 외투를 벗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DNA 자체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합성 있는 지적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적절히 분리 대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계 체제 구축과정의 유동적인 과도기야말로 체제 변화의 진폭이 큰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창출과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은 그만큼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가미된 시나리오와 정치한 분석에 바탕을 둔 유연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